

# 미혼모 지원정책의 현황과 개선방향

2009년 10월

국회의원 이정선

# 제 출 문

국회의원 이정선 귀하

---

본 보고서 “미혼모 지원정책의 현황과  
개선방향”을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

2009년 10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혜영

## \* 목 차



I . 들어가는 말 .....	1
II . 미혼모의 발생현황과 추이 .....	2
III . 미혼모 지원정책의 범주와 특성 .....	5
IV . 지원정책의 발전방향 .....	11
참고문헌 .....	15

## 미혼모 지원정책의 현황과 개선방향<sup>1)</sup>

김혜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I 들어가는 말

최근 들어 성경험의 연령은 더욱 낮아지고, 개방적인 성문화의 확산이 가시화되면서 혼전 성경험에 대한 금기는 상당부분 완화되고 있다. 특히 사랑이 전제된 성인남녀의 혼전 성관계는 규범적으로도 어느 정도 용인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애정이 동반되지 않을지라도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성관계 할 수 있다는 인식이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확산됨에 따라 혼전 성관계를 도덕적 차원에서 단죄하거나 부정하는 경향은 과거에 비해 크게 약화되고 있다.

그러나 혼전 임신과 출산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은 낮아 미혼의 상태에서 임신과 출산을 경험한 여성을 바라보는 대중의 시선은 여전히 차별적이다. 더욱이 어려운 상황에서 자녀출산을 감행하고 아이를 양육하는 미혼모들의 경우에는 특정한 편견과 사회적 냉대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이는 무엇보다 결혼이라는 제도적이고 법률적인 관계에 의한 임신과 출산만을 합법적인 것으로 규정하는 문화관행이 한국사회에서 강하게 작동되고 있기 때문이다.

요컨대 미혼남녀의 성경험에 대한 관용적 분위기와는 별개로 여전히 미혼남녀의 성관계에 의한 자녀 출산은 공개할 수 없는 개인사인 동시에 개인, 특히 여성에게 평생에 걸

1) 본 글은 『미혼모와 그들 자녀에 대한 국민의식조사』(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혜영 외, 2009) 가운데 일부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임.

친 불명예의 낙인을 안겨주는 돌이킬 수 없는 사건으로 규정함으로써 임신한 미혼여성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지속적으로 재생산하고 있다. 미혼모에 대한 이같은 편견과 사회적 거리감은 때로 여성의 시민권과 모성권의 부정을 중용함으로써 이들로 하여금 낙태를 선택하거나 출산 후 자녀양육을 포기하도록 하는 구조적 요건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 결과 한국은 혼인외 출생아수가 매우 낮은 국가인 동시에 낙태 비합법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낙태가 빈번히 자행되는 모순적인 사회적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대부분의 사회에서 미혼모에 대한 시각이 곱지 않은 것이 사실이지만,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수용 정도와 포용의 방식은 여성과 섹슈얼리티, 가족제도를 둘러싼 사회문화적 배경에 따라 매우 상이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미혼모를 바라보는 특정 사회의 관점과 수용의 정도는 곧 미혼모에 대한 정책적 접근과 지원방식의 차이를 낳는다. 이런 점에서 한국사회 또한 미혼모에 대한 지원정책은 없지 않으나, 이들에 대한 사회적 인정과 통합을 모색하기에는 턱없이 미약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본 논의에서는 미혼모 발생현황과 추이와 함께 한부모가족지원법을 중심으로 한 미혼모지원정책을 간략히 살펴봄으로써 향후 미혼모지원정책의 주요 개선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 II 미혼모의 발생현황과 추이

넓은 의미에서 본다면, 미혼모는 미혼의 상태에서 혼전임신 및 출산, 인공임신중절과 별거, 이혼, 사별상태에서 배우자와 관계없는 아이를 가진 경우가 포함되는 것이지만(NASW, Encyclopedia of Social Worker, 1965; 보건복지부, 1999:30), 법률상으로는 정당한 혼인 관계에 의하지 않고 성관계를 통해 자녀를 분만한 여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따라서 출산하지 않은 임신부는 미혼모의 범주에서 제외되는데, 이는 미혼여성의 임신중절율이 높은 우리현실에서 미혼모의 규모와 의미를 축소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즉, 이러한 정의는 한국사회에서 미혼여성의 임신율이나 미혼모의 수를 전혀 가늠할 수 없게 할 뿐만 아니라 미혼 여성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인공임신중절을 쉽사리 선택하게 만드는 주

요한 배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연간 낙태 건수 35만 건 가운데 미혼여성의 낙태건수는 약 14만 건으로 전체 낙태건수의 42%를 차지하고 있다(보건복지부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및 종합계획 수립」, 2005).

혼인관계에 진입하지 않은 여성의 자녀출산을 용인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들을 백안시하는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미혼모는 그 존재 자체가 쉽게 노출되지 않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한국사회의 경우, 미혼모의 규모에 관한 정확한 데이터를 발견하기란 쉽지 않다. 다만 미혼모 규모와 관련하여 가장 포괄적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통계청의 인구센서스 자료를 통해서 미혼모자 가구의 추이를 일부 확인할 수 있다. 아래의 <표 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한부모 가구 가운데 여성가구의 결혼지위가 미혼인 경우가 미혼모가정에 해당된다. 이들 가구의 수는 1995년 90,986가구, 2000년 117,764가구, 2005년 133,234가구로 꾸준히 증가해 왔으며, 이들 가구에 미혼부 가구를 포함할 경우 미혼부모 가구는 조금 더 높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자료 역시 미혼모부 가운데 자신들이 미혼임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있음을 공개하거나 적어도 자녀와 함께 가구를 구성한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표 1〉 년도별 결혼지위별 한부모가정

(단위: 가구)

연도	구분	가구전체	한부모 가정	모+자녀 가정	부+자녀 가정
2005년	가구계	15,887,128	1,369,943	1,083,020	286,923
	사 별	1,832,308	501,095	427,209	73,886
	유배우	11,120,410	327,864	263,716	64,148
	이 혼	904,154	398,532	258,861	139,671
	미 혼	2,030,256	142,452	133,234	9,218
2000년	가구계	14,311,807	1,123,854	903,857	219,997
	사 별	1,561,841	502,284	438,226	64,058
	유배우	10,739,411	252,917	194,690	58,227
	이 혼	552,720	245,987	153,177	92,810
	미 혼	1,457,155	122,666	117,764	4,902

연도	구분	가구전체	한부모 가정	모 + 자녀 가정	부 + 자녀 가정
1995년	가구계	12,958,181	959,972	787,574	172,398
	사 별	1,407,557	526,320	458,298	68,022
	유배우	10,060,042	216,067	165,401	50,666
	이 혼	277,798	123,969	72,889	51,080
	미 혼	1,212,746	93,616	90,986	2,630

출처: 통계청. 각 년도별 인구센서스; 이미정(2008): 7

이런 점에서 미혼모 규모의 일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혼외출생아 수를 살펴보는 방법이 있지만, 이것 역시 미혼모의 규모와 혼외출생아 수가 일치한다고 단언하기 어렵다. 미혼모 자녀의 99% 가량이 해외로 입양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출생 후 미혼모의 친권포기를 통한 국내 비밀입양 등의 다양한 경우의 수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외출생아 수를 통해 혼인관계 이외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자녀출산의 추이를 대략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혼인 외의 출생아 수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06년의 경우 총 출생아 중에서 혼인 외의 자는 6,863명으로 전체의 1.5%를 구성하고 있으며 해마다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이미정, 2008:9).

〈표 2〉 혼인상태별 출생아 수(단위: 명)

연도	총계	혼인중의 자	혼인 외의 자	미상
2006년	451,514	442,038	6,863	2,613

출처: 통계청, 인구동태조사

한편, 국내 입양기관을 통한 미혼모 수의 추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미혼모 시설에 입소한 여성의 수는 미혼모관련 시설의 개소 수 증가와 함께 증가해 왔다. 즉 1991년 1,029명(시설 10개소), 2000년 1,273명(8개소), 2004년 1,620명(11개소), 2005년 2,123명(18개소), 2007년 2,656명(25개소)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음을 알 수 있다. 또

한 입양아동 역시 91년 3,438명에서 95년 3,205명, 2000년 4,046명, 2002년 4,059명, 2005년 3,562명 등으로 연간 3,000여명에서 4,000명에 이르며, 2004년 해외입양아 가운데 미혼모 아동은 99.0%, 요보호 아동가운데 미혼모 아동은 42.6%에 달하고 있다. 다만 2007년의 경우 요보호 아동 가운데 미혼모 아동은 약 27.3%인 2,417명으로 감소세를 보여주는데(보건복지부, 2007), 이는 최근 들어 양육을 선택하는 미혼모의 증가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추론된다.

### III 미혼모 지원정책의 범주와 특성

한국사회에서 미혼모와 관련된 조항들은 민법을 위시하여 사회복지법, 아동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보호법, 입양특례법, 모자보건법, 청소년기본법 등에 걸쳐져 있다. 대체로 민법에서는 법률혼주의에 입각한 결혼과 출생아동의 법적지위에 관한 것이 규정되어 있으며, 아동복지시설의 재정적 지원이나 서비스 실시를 규정하는 아동복지법, 그리고 2007년 개정된 한부모가족지원법은 아동을 양육하는 모부자 가족과 조부모들 가운데 저소득층을 보호대상자로 규정하여 이들에 대한 지원 자격과 범위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비해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국내외 입양서비스의 기본법으로 모든 입양의 근거가 되고 있으며, 사회복지사업법은 미혼모를 보호 지원하는 사회복지상담, 직업보도 및 모자복지는 물론 사회복지관 운영의 지침을 명시하고 있다. 이밖에도 의료보호법에서는 미혼모 보호시설 수용자에게 의료혜택제공 등에 관한 지침 등이 규정되고 있다(도미향, 2001).

미혼모에 대한 가장 포괄적인 지원을 명시하고 있는 것은 바로 2007년 10월 개정된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이는 저소득의 한부모, 미혼모, 조손가족 등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 가운데 미혼모 지원에 관한 것은 양육미혼모의 자립지원 강화를 위하여 양육미혼모 자립지원시설인 미혼모자공동생활가정 추가 설치 및 운영사항에 관한 규정과 미혼모자시설의 출산 직후 미혼모에 대한 자녀 양육지원 사업 등의 내용과 함께 한부모



가족 자녀양육비 이행확보 무료법률구조사업 중 미혼부 상대 자녀 인지청구 소송 지원에 관한 부분이 명기되어 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제19조 5항에 근거하여 미혼여성이 임신하였거나 출산하였을 경우 안전하게 분만하고 심신의 건강을 회복하며 아동의 양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 운영되고 있다. 미혼모만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시설로는 미혼모자시설과 미혼모자·미혼모 공동생활가정이 있는데, 미혼모자시설은 1991년 10개소, 2000년 8개소, 2003년 10개소, 2005년 18개소로 증가하여 현재에는 27개소에 달하며 공동생활가정은 2003년 5개소가 문을 연 이래 꾸준히 증가하여 2008년 현재 21개소(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 19개소, 미혼모 공동생활가정 2개소)이다. 그 결과 이러한 시설 이용자 수는 90년대 1,000여명에 불과한 것이 현재는 연 2,000명을 상회하고 있다(보건복지가족부, 2009).

그러나 미혼모자시설은 서울과 경기지역의 다수가 분포되어 있지만, 충남, 경남지역의 경우에는 운영되는 곳이 한곳도 없으며, 미혼모자공동생활가정의 경우에는 충북, 전북, 경북의 지역에서는 전혀 운영되지 않고 있어 지역 간 불균형을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미혼모자시설의 전체 정원은 703명으로 시설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대략 15~50명 선을 적정규모로 볼 수 있는데, 연평균 미혼모자시설을 이용한 여성의 수가 2,000명에 달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수요대비 시설은 결코 충분하다고는 볼 수 없다. 더욱이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은 이들 미혼모자시설 이용자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미혼모자시설에 비해 유동적인 이용자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연평균 이용자 수는 자녀 포함하여 236명 내외를 벗어날 수 없는데, 이는 미혼모자시설 연평균 입소자수 가운데 양육을 선택하는 미혼모를 어림잡아 1/3로 계산할 경우 수요대비 1/5 가량에 불과하다.

한편 미혼모와 그들 자녀를 지원하는 시설에서 제공되는 구체적인 지원내용은 다음의 <표 3>과 같다.

〈표 3〉 미혼모 가족대상 복지시설(2008. 12. 31 현재)

구분	미혼모자시설	미혼모자·미혼모공동생활가정 <sup>2)</sup>
대상	미혼의 임신부 및 출산 후(6월 미만) 일정기간 아동의 양육지원이 요구되는 여성으로서 분만혜택과 숙식 보호를 필요로 하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 2세 미만의 영유아를 양육하는 미혼모로서 일정기간 숙식보호와 자립지원을 필요로 하는 자</li> <li>- 미혼모 공동생활가정: 출산 후 아이를 양육하지 아니하는 미혼모로서 일정기간 숙식보호와 자립지원을 필요로 하는 자</li> </ul>
보호기간 (연장가능기간)	1년(6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혼모자: 1년(1년)</li> <li>- 미혼모: 2년(6월)</li> </ul>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숙식무료제공</li> <li>- 분만의료 혜택</li> <li>- 자립지원: 직업 및 인성교육</li> <li>-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경비 지원</li> <li>- 시설장은 입소자에게 지원되는 내용을 알려 시설운영의 투명성 제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양육비 지원(한부모가족지원법 대상 및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에 한함)</li> <li>- 숙식무료 제공</li> <li>- 만 4세 이하 자녀를 법정 저소득층 아동으로 포함시켜 보육료 100% 지원(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에 한함)</li> <li>- 자립프로그램 실시</li> <li>-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경비 지원</li> <li>- 시설장은 입소자에게 지원되는 내용을 알려 시설운영의 투명성 제고</li> </ul>
시설수	27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혼모자: 19개소</li> <li>- 미혼모: 2개소</li> </ul>
입소정원	703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혼모자: 236명</li> <li>- 미혼모: 26명</li> </ul>
운영비 지원예산*	1,275,000원(인/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혼모자: 927,000원(세대/년)</li> <li>- 미혼모: 207,000(인/월)</li> </ul>

\* '08년도에는 '04년 시설운영비가 통합관리운영비로 변경되면서 감소된 감소분(16.4%)과 '04년부터 '07년까지 상승한 물가상승율(10.8%)을 반영하여 운영비 지원기준을 마련하였고, '09년도에는 사회복지생활시설 인건비 인상을 반영하여 '08년 시설 운영비 가이드라인에서 3% 인상하여 마련함.

\*\* 출처: 보건복지가족부(2009).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p.134-139, 233-234에서 관련 내용 발췌 및 재구성

이 밖에도 저소득 모자가정을 일정기간 보호하여 생계를 지원하고 퇴소 후 자립기반을

- 2) 지난해 모·부자복지법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개정하며 '미혼모 지원시설'을 '미혼모자 지원시설'로 바꿔 자녀양육지원을 분명히 했고, '미혼모자공동생활가정'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미혼모자공동생활 가정은 갓 출산한 미혼모가 아이와 함께 1년쯤 머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룹홈'으로, '미혼부자지원시설'도 지난해 인천에서 처음 문을 열었다(한겨레신문, 2008/05/01 19:46). 이 시설은 2003년 처음 개소할 때는 양육 미혼모 중간의 집에서 점차 양육그룹홈, 미혼모자·미혼모 공동생활가정으로 분류되고 있다.

조성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모자보호시설은 전국에 41개소가 있는데(보건복지가족부, 2009), 미혼모자시설(또는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 퇴소자 가운데 스스로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모는 거주지에 상관없이 입소가능하다. 거주기간은 3년으로, 2년 연장이 가능하며, 생계비, 고등학생 학비, 방과 후 아동지도, 아동급식비, 직업훈련수당, 복지자금융자 지원, 영구임대주택 입주 우선권, 보육시설 이용 시 보육료 감면, 모자보호시설 퇴소 시 정착금으로 2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이에 비해 저소득 모자 세대에게 일정기간 주택편의만을 제공하는 시설로는 모자자립시설이 있는데, 전국 3개소로 정원은 41세대이다. 이 역시 모자보호시설에서 퇴소한 모자세대 가운데 자립준비가 미흡한 경우에는 입소가능하다. 모자보호시설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 가운데 고등학생 학비, 직업훈련수당, 영구임대주택 입주 우선권만 지원되는데, 지원범위와 규모를 떠나 절대적으로 시설의 수가 부족한 실정이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근거하여 미혼모와 그들의 자녀에게 지원되는 내용은 다음의 표 4>와 같다. 또한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제5조2항(보호대상자의 범위에 대한 특례)에 따르면, 출산 후 해당 아동을 양육하지 아니하는 미혼모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제19호제1항 제1호의 미혼모 공동생활가정 이용시 이 법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표 4〉 한부모가족지원 내용

구분	복지의 내용
복지급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계비</li> <li>- 아동교육지원비</li> <li>- 직업훈련비 및 훈련기간 중 생계비</li> <li>- 아동양육비(미혼모나 미혼부가 5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적인 복지급여 실시함. 이 경우 미혼모나 미혼부의 직계존속이 양육하는 경우에도 추가적인 복지급여 실시함)</li> <li>-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li> </ul>
복지자금 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에 필요한 자금</li> <li>- 아동교육비</li> <li>- 의료비</li> <li>- 주택자금</li> </ul>

구분	복지의 내용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부모가족 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자금
고용촉진	-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직업알선 - 사업장에서의 우선 고용
가족지원서비스	- 아동의 양육 및 교육 · 부양 · 가사 · 가족관계 증진 서비스 등
주택	- 국민주택의 분양 및 임대 시 일정비율 우선 분양

출처: 보건복지가족부(2009).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p.354-362에서 관련 내용 발췌 및 재구성

이 밖에 위기에 처한 모자가정이나 미혼모는 3일 이내 긴급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7일까지 연장 가능한 여성 긴급 피난처를 이용할 수 있으며, 보호시설에 있는 미혼모의 경우 무료진료 및 분만비를 지급받을 수 있고, 저소득 모자가족에 해당되는 미혼모는 저렴한 비용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하여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면,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저소득 미혼모부자 가정의 아동은 영유아보육법 제34조에 근거하여 보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 보육에 필요한 비용은 가구의 소득수준 거주지역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혼부모의 지원은 한부모가족지원법을 통해 다양한 보호 시설과 지원의 근거를 명시하고 있지만, 실제 지원대상자의 수와 지원범위는 크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더욱이 한부모가족지원법은 남녀 한부모와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부모 등과 더불어 미혼모를 포괄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혼모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특히 미혼모를 위한 시설운영에 있어 미혼모자시설 지원의 경우, 출산 후 자녀 양육에 관한 지원은 제외되어 있어 실제로 출산아동을 직접 양육하거나 입양이나 보호시설 등으로 보내기 전까지의 모든 비용은 미혼모의 몫으로 돌아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미혼모보호시설 입소자는 의료보호 비적용 분야의 의료비 발생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특수치료비로 1인당 20만원<sup>3)</sup>만 지급되고 있어 개인별 사용액 상계는 가능

3) 미혼모특수치료비로 2008년도 대비 3% 인상하여 1인당 232,000원을 지급하고 있음(보건복지가족부,

하나 초과액은 시설이 부담하는 등 불합리한 면이 있다(허남순, 2006).

모자시설의 경우 역시 입소자격의 차별은 없으나 실제 사별이나 이혼 등으로 혼자된 기혼여성들이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미혼모 보호시설에서 퇴소하는 양육모를 위한 지원체계는 양적으로 질적으로 크게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양육미혼부모들의 가장 큰 어려움은 바로 경제적인 문제이며,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요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자녀양육을 위한 안정적인 주거마련이다. 그러나 양육미혼모를 위한 주거비지원이나 주택지원 프로그램은 거의 부재하다. 특히 양육을 결정한 미혼모 가운데는 자녀양육을 둘러싼 원가족과의 갈등으로 시설 퇴소 후 거주할 공간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이는 때로 양육을 포기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임대주택우선분양제도가 있으나 신청 후 대기기간 등으로 인해 긴급한 주거 욕구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향후 전세대출 자금 지원 등 다양한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르면,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경우 만 10세 미만의 아동에 한해 월 5만원이 지급되는데, 이들 지원액의 규모가 턱없이 적을 뿐만 아니라 아동연령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지급되는 점, 어린 아동을 시설에 보내지 않고 개인이나 친인척에게 아동 보육을 의뢰한 경우는 사실상의 보육비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자녀양육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안 또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 더해 미혼모의 부모가 미혼모의 자녀양육을 거부하여, 부모로부터의 독립을 감수하고 자녀양육을 선택하는 미혼모의 경우 부양의무자인 부모가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권자로 지정받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특히 10대 청소년 미혼부모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뿐만 아니라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을 가진 절대 빈곤층이 되어야만 수급자가 될 수 있는 현행제도 상에서는 의료보호 및 영유아보육 지원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많은 미혼모들이 수급권 탈락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취업 및 자립을 포기하는 경우 또한 적지 않기 때문에 일원화된 자격기준체계의 재고 또한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한국사회에서 미혼부모에 대한 지원정책은 한부모가

---

2009).

족지원법에 근간을 두고 있지만 실제로 한부모가족지원법의 혜택을 받는 한부모 가족은 총 한부모 가족의 5%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우리현실에 비추어본다면 미혼모에 대한 지원의 폭과 규모를 짐작할 수 있다(한국여성노동자협회, 2006). 더욱이 한부모가족지원책은 어느 한부모와는 다른 개인적, 환경적 특성을 보이는 미혼모들의 욕구를 적절하게 반영할 수 없다는 점에서 미혼부모에 대한 종합적 지원정책이기 보다는 출산을 목전에 둔 미혼모여성의 산전후 회복과 임신보호의 기능을 갖춘 긴급구호의 차원에 머무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IV 지원정책의 발전방향

한국사회에서 임신과 출산은 제도적인 가족관계 틀 내에서만 그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법률적인 혼인관계에 진입하지 못했거나 이탈된 여성의 임신과 출산은 여전히 상당한 문화적 압력을 받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특히 미혼의 신분으로 임신과 출산을 경험한 여성들에게는 ‘어머니’로서의 권리와 의무보다는 합법화되지 않은 관계에서 자녀를 임신한 ‘일탈자’의 지위가 강조됨에 따라 미혼모들은 임신과 출산을 공개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임신, 출산, 양육의 매 단계마다 심각한 선택과 결정을 강요받고 받고 있다. 비교적 이른 나이에 미혼상태에서 경험하는 여성의 임신과 출산은 당사자와 그 가족에 국한된 문제로 그치지 않으며, 미혼모 자신과 그들의 자녀와 원가족, 나아가 미혼부와 그들 가족생활의 많은 변화를 초래한다. 뿐만 아니라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소중한 인적자원에 대한 관심과 투자라는 점에서도 향후 미혼모와 그들 가족에 대한 많은 관심과 적극적 지원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그러나 미혼모에 대한 문제는 동서고금을 막론하여 전혀 새로운 이슈가 아닐 뿐만 아니라 보수적인 사회문화적 환경에서는 이들에 대한 지원정책의 공감대를 쉽게 확보할 수 없다는 어려움이 있다. 특히 노동시장의 경쟁이 가속화되는 현실에서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의 양육미혼모들의 경제적 어려움은 곧 이들이 주요 여성빈곤층으로 연계된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10대 미혼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미혼모의 평균연령이 20대 초반임을 상기한다면, 조기개입을 통해 이들의 노동권과 부모권을 보장해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들은 곧 빈곤여성의 중심세력인 동시에 이같은 빈곤상황이 노년기로 이어져 이들에게 투여되는 복지비용의 총량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혼부모와 이들 자녀에 대한 지원정책의 의미와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특히 가족형성에 있어 각자의 삶의 방식에 따른 다양성이 인정되는 사회변화의 맥락에서 바라본다면, 미혼의 모자가족이나 부자가족이 사회적으로 배제되어야 할 이유는 전혀 없다.

미혼모에 대한 시각과 정책접근방식은 사회마다 각기 다른데, 예컨대 영국과 미국에서는 정숙함을 강조하는 예방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반해 스칸디나비아의 국가들은 좀 더 자유로운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따라서 영국이나 미국과 달리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은 70년대 이후부터 피임, 낙태에 대한 정보를 강조하여 10대의 임신·출산을 감소시키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회에서 미혼모에 대한 사회정책은 공통적으로 이들의 경제·사회적 자활성의 접근과 사회적 배제에 대한 투쟁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다(장혜경, 김혜영 외, 2006:79). 한국의 미혼모정책 방향 역시 이들의 경제·사회적 자립능력의 제고와 차별해소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점에서 서구의 다른 나라들과 유사하다.

그러나 서구에 비해 한국사회에는 상당부분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혈연성과 제도적 혼인에 근간한 가족주의가 강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미혼부모에 대한 사회적 차별해소가 가장 중요한 정책 아젠다로 부각될 필요가 있다. 미혼부모에 대한 사회적 인식, 특히 혼전에 임신한 여성이라는 편향적 사실만을 강조하여 이들을 배제하고 차별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는 자녀양육을 선택하는 양육모들에 대한 격려의 시선과 더불어 남녀 동등한 책임에도 불구하고 임신과 출산의 주체라는 이유로 여성만을 비난하고 모든 책임을 여성에게 떠맡기는 가부장적 사회문화의 질적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나이가 어리고 미숙한 판단에 의한 결과일지라도 생명의 소중함을 인지하고, 자녀를 출산한 미혼모, 나아가 자녀양육을 선택한 미혼여성들이 자신들의 선택을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미혼모에 대한 구체적인 차별해소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미혼모들은 경제적 지원과 더불어 가족의 이해와 배려를 절실히 요구하고 있어 이들을 바라보는 제 3자의 시각뿐만 아니라 주변의 친지와 친구 가족 등에 대한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 원가족의 관계회복을 위한 상담 및 지원관리프로그램의 운영과 효과성 제고 역시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차별완화가 매우 중요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끝으로 미혼모정책은 그 어떠한 정책보다 예방적 차원에서의 적극적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10대 청소년 미혼모가 더 이상 늘지 않도록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성교육 강화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한쪽에서는 10대의 미혼모 문제가 심각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강력한 입시경쟁에 놓여있는 것이 한국 청소년의 실상이다. 따라서 수적인 비중만을 놓고 성교육보다는 입시중심의 교육을 우선시하지 않도록 의무적으로 실시되는 성교육의 실효성 강화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효과적인 성교육관리 및 평가체계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남녀관계와 임신예방에 그치기보다는 임신과 출산, 양육의 전 과정을 아우름으로써 성행위에는 남녀 개인 모두는 물론 사회적 책임이 수반되는 것임을 인식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10대 청소년의 미혼모들의 경우에는 본인 스스로의 성장과 성인기로의 진입을 위한 준비가 더 많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원가족의 다양한 도움과 개입이 요구되고 있다.

동일한 맥락에서 10대 후반과 20대 초반의 미혼모들의 학업복귀와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종합지원대책 또한 대단히 시급하다. 입시교육만을 강조하는 현행의 학교교육 풍토에서 청소년기의 미혼모들은 학교로 돌아가고 싶어도 이들을 받아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양육을 선택한 경우에는 학교생활적응 조차 쉽지 않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특별한 교육지원정책의 일환으로 입시와 직업교육을 선택하여 교육 및 훈련의 기회가 제공되는 종합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이들 교육기관을 대안학교 혹은 학력인정기관으로 수용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이들의 검정고시준비와 홈스쿨링 등을 지원해주는 한편, 전국에 산재해 있는 여성인력개발센터 및 직업훈련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무상 직업훈련기회의 제공을 통해 이들의 경제적 자립의지를 지원해주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현재 미혼부모관련 시설 및 서비스 인프라 점검을 통한 종합적인 미혼모정책의 수립과 미혼모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2008년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한부모가족지원업무는 보건복지가족부 이관되었는데, 이를 계기로 미혼모지원업무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을 통해 미혼모 지원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평가, 협력 및 정보교환이 이루어지는가를 살펴보고, 이에 기반하여 미혼모에 대한 일관된 통계자료의 생산은 물론 이들에 대한 종합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이러한 종합지원대책의 수립에는 현재 미혼부모들에게 지원되는 아동양육 지원 서비스를 다양화하고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지원방안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황정미, 김혜영 외, 2007:90). 예컨대 개인택아, 가정택아 및 친인척에 의한 보육을 인정하여 이러한 비용이 지원될 수 있도록 보육비 지원의 다각화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학업, 취업 등 양육미혼부모에 맞춘 다양한 보육서비스 프로그램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 특히 안정적인 양육 환경 제공을 위해 아동의 연령이 만 3세에 이르기까지 국민기초생활법 상 미혼부나 모의 부양 의무자 관계 조건을 유예하여 수급권을 확보하는 방안과 양육 미혼모나 부를 위한 정착금 지원방식을 모색하는 등 보다 다각적인 지원정책의 마련은 매우 시급하다.

## 참고문헌

- 김혜영, 2008, “미혼모정책 어디로 가야하는가”, 「미혼모를 둘러싼 현황과 쟁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혜영, 이미정 외, 2009, 「미혼모와 그들자녀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KUMSN·한국여성정책연구원
- 도미향,정은미, 2001, “10대 미혼모의 문제와 복지대책에 관한 연구”, 「청소년복지연구」 3권 2호:1-11.
- 문의승, 임애덕, 2006, “미혼모·미혼양육모와 입양에 대한 지역주민의 태도 연구”, 「논문집」 26집:393-422.
- 박복순, 전해정, 2007, 「2008년부터 달라지는 가족법 가족관계등록법 해설」2007 연구보고서(수시과제)-3,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배영미, 2001, “청소년 미혼모의 기질과 성격유형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8권 3호:45-70.
- 보건복지가족부, 2008, 「2008년도 아동복지사업 안내」.
- 보건복지가족부, 2009, 「2009년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 서울시 부녀복지연합회, 1996, 「한국미혼모복지의 현황과 발전방향」, 제 1 회 여성복지세미나 자료.
- 안순덕 외, 1984, 「미혼모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 윤미현, 2000, “10대 미혼모의 임신 및 유아입양 관련 요인들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미정, 김혜영 외, 2009, 「한국의 미혼모 복지에 관한 연구: 해외입양, 관련통계, 선진국의 복지정책을 중심으로」 KUMSN·한국여성정책연구원
- 한국여성개발원, 1984, 「미혼모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 한국여성개발원, 1987, 「미혼모발생 예방대책에 관한 프로그램」, 한국여성개발원.
- 한국여성노동자회, 국회의원 홍미영 의원실, 2006 「한부모 빈곤여성 자립정책 진단 및

법·제도 개선과제 토론회」.

한인영, 1998, “미혼모 발생현황 및 미혼모 복지의 방향”, 한국모자보건학회 춘계학술대회.

황정미, 김혜영 외, 2007, 「가족돌봄의 사회화 등 가족정책 과제 개발 연구」, 여성가족부.

허남순, 2006, 「미혼모부자 종합대책에 관한 연구」, 여성가족부.